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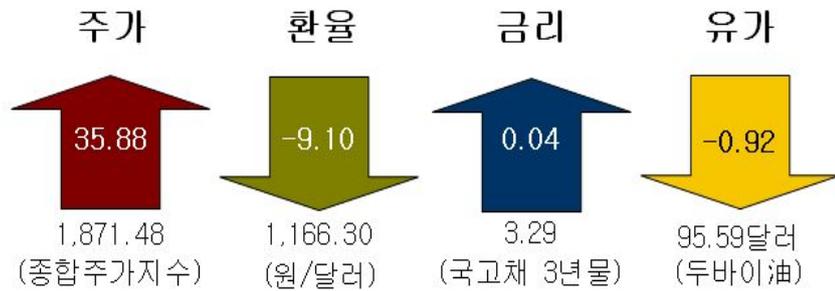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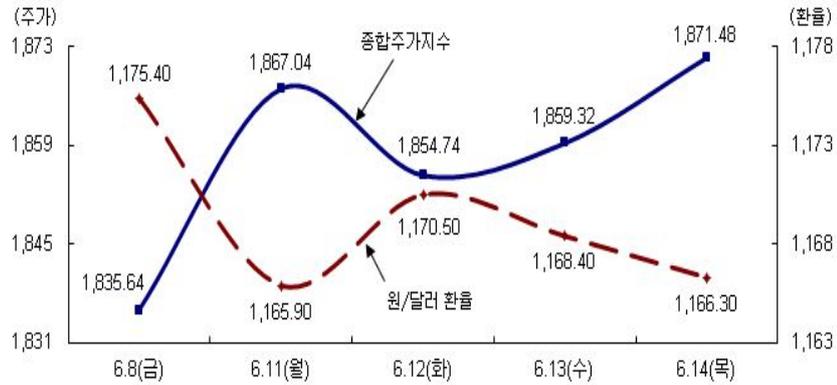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
- 양극화 점차 개선 조짐이 보인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8~6.1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집필 : 이 부 형 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선 임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

- 양극화 점차 개선 조짐이 보인다!

■ 양극화의 개념과 영향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 점차 축소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

■ 부문별 국내 양극화 실태

국내 양극화 실태를 가계소득 및 불평등도, 가계소비, 고용 및 일자리, 임금,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의 5가지 부문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 양극화 현상은 주거부문 격차 확대와 같이 심화되고 있는 부문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완화되고 있다.** 첫째, 가계 소득 및 불평등도의 경우, 최근 중산층 비중이 상승하고, 경제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하락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은 2008년 66.3%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2011년에는 67.7%까지 회복되었다. 지니계수도 2009년 0.295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에는 0.289로 다소 하락하였다. 둘째, 가계 소비 중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는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 격차는 1990년대 1.1%p에서 2000년대 이후 1.0%p로 미약하나마 축소되었고, 교육비 지출 비중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반면,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의 거주비 지출 비중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셋째, 고용 및 일자리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1998년 12.2%까지 상승한 후 2011년에는 6.9%까지 하락하였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차이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작게는 1.6%p에서 크게는 2.7%p까지 축소되었다.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이 2011년 61.3%까지 상승하면서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대폭 하락하였다. 넷째, 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물론 제조업과 비제조업 임금 격차도 최근 축소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0년 103.6만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011년 102.6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 격차도 2003년 22.9만원에서 2011년 12.6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다섯째,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양극화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총자산 및 매출 증감률 차이는 1990년대 대비 2000년대에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대·중소기업이 1990년대 평균 2.9%p에서 2000년 이후 2.5%p로, 수출·내수기업은 1990년대 1.8%p에서 2000년 이후 0.3%p로 축소되었다.

■ 시사점

국내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다 최근에는 완화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선,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일하는 복지를 위한 투자 확충, 주거나 보육과 같은 취업인프라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양극화 문제도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부문의 혁신 가속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의 실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소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의 자원이전에 의한 제로섬 분배가 아닌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1.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논쟁

○ 최근 국내 중산층 비중 하락, 지니계수 상승, 청년 실업 증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심화, 대·중소기업 간 격차 발생 등을 주요 전제로 양극화 논란이 가속되고 있음

- 양극화의 개념

·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이 점차 축소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격차사회(格差社會)라고 함

- 최근 양극화 관련 논의의 문제점

· 양극화는 경제, 사회 상황 변화에 따라 소득과 소비 뿐 아니라 사회 각 계층 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 사회 각 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정도도 상대적인 척도로 살펴볼 경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¹⁾
 ·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양극화 현상을 고용, 임금구조, 기업 형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계층 구조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극화 대책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하, 국내 양극화 실태에 대해, 가계소득 및 불평등도, 가계소비, 고용 및 일자리, 임금,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양극화 현상 검토 분야 >

구분	세부 분야
가계(소득 및 불평등도)	- 소득계층별 가구 분포, 지니계수
가계(소비)	- 교육과 주거비
고용 및 일자리	- 연령대별 실업률,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임금	- 업종별 임금, 임금근로자 지위별 임금
기업 성장 및 수익률	- 대·중소기업과 수출·내수기업의 총자산, 매출, 영업이익

1) 변양규 외(2012)에서는 불평등도를 상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근로자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최근 들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의 양극화가 기존 우려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이하고 있다고 밝힘. 변양규 외(2011),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한국경제연구원.

2. 부문별 양극화 실태

① 가계소득 및 경제적 불평등도

○ 국내 중산층 비중은 추세적인 감소세를 보여 외환위기 당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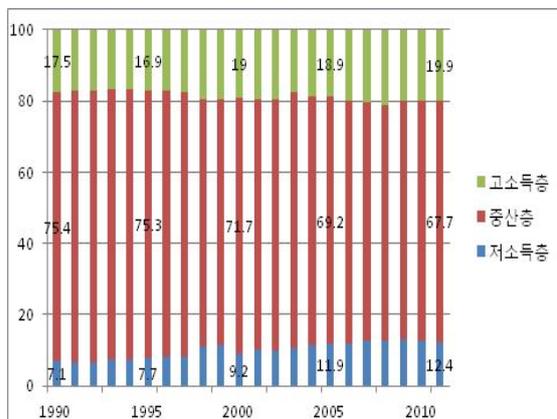
- 국내 중산층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낮고, 저소득층 비중은 높은 실정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득5분위배율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국내 저소득층 비중은 12.4%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각각 10.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소득5분위배율도 유사한 추세

- 다만, 최근 들어 중산층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국내 중산층 비중은 2008년 66.3%까지 하락하다,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1년에는 67.7%까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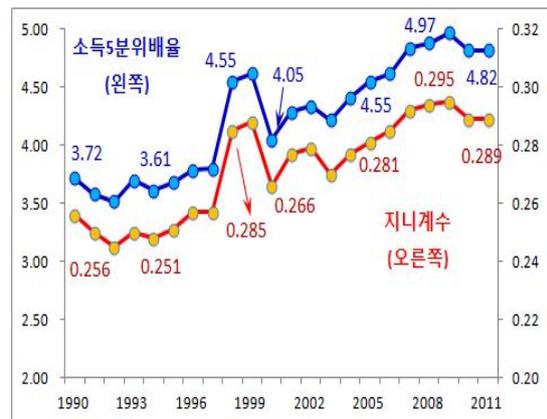
○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하락세로 전환

- 지니계수는 2011년 0.289로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998년 0.285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지만, 2010년부터 하락세로 전환

< 소득계층별 비중 분포 추이 >



< 지니계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 주 1. OECD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 중산층은 50~150%,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말하며, 여기서도 이를 따름.
 2. 지니계수는 도시 2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② 가계 소비 : 교육과 주거비

○ 가계 소비 가운데 교육비의 경우 소득 5분위계층과 1분위 계층의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지출 비중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주거비지출 비중 격차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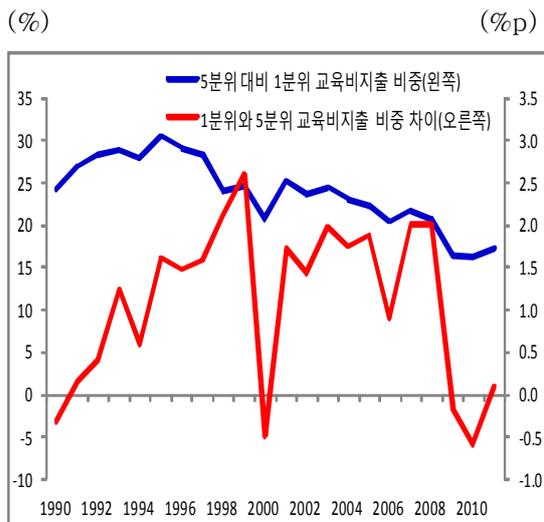
- 소득 5분위 계층과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지출 비중 격차가 축소되고 있음

· 소득 5분위계층과 1분위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지출 비중 격차는 1990년대 1.1%p에서 2000년대 이후 1.0%p로 미약하나마 축소되었으며, 5분위계층 대비 1분위계층의 교육비지출 비중도 최근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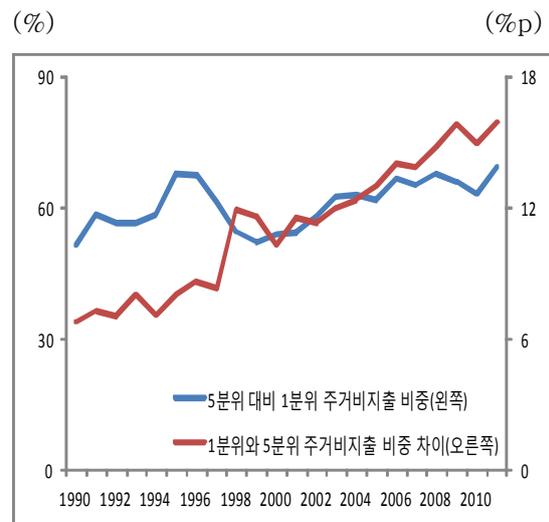
- 반면, 소득 5분위 계층과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거주비지출 비중 격차는 확대

· 소득 5분위계층과 1분위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지출 비중 격차는 1990년대 8.5%p에서 2000년대 이후 13.3%p로 상승하였으며, 5분위계층 대비 1분위계층의 주거비지출 비중도 2000년대 들어 지속 상승

< 가처분소득 중 1분위와 5분위 교육비지출 비중 차이 >



< 가처분소득 중 1분위와 5분위 주거비지출 비중 차이 >



자료 : 통계청.
주 : 가처분소득 기준임.

③ 고용 및 일자리

-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7%대 전후로 추이하면서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장년층 실업률과의 차이도 축소
 - 청년층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2.2%까지 상승한 청년층 실업률이 2011년 6.9%까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다만, 최근 들어 30~59세의 장년층 실업률과의 차이가 축소
 - 청년층과 장년층 실업률 차이를 보면 30~39세와는 외환위기 당시 6.5%p에서 2011년 3.8%p, 40~49세 및 50~59세와는 동기간 6.6%p에서 5.0%p로 축소

<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10	2011
15-19세	9.2	27.9	20.8	13.8	11.6	10.2	9.5
20-29세	4.9	4.3	11.4	7.1	7.4	7.1	6.7
30-39세	1.6	1.4	5.7	3.4	3.2	3.3	3.1
40-49세	1.2	1.1	5.6	3.3	2.4	2.2	1.9
50-59세	1.1	0.9	5.3	2.9	2.3	2.2	1.9
60세 이상	0.4	0.4	2.4	1.3	1.2	2.4	2.1
15-29세	5.5	4.6	12.2	7.6	7.6	7.3	6.9
계	2.4	2.1	7.0	4.1	3.5	3.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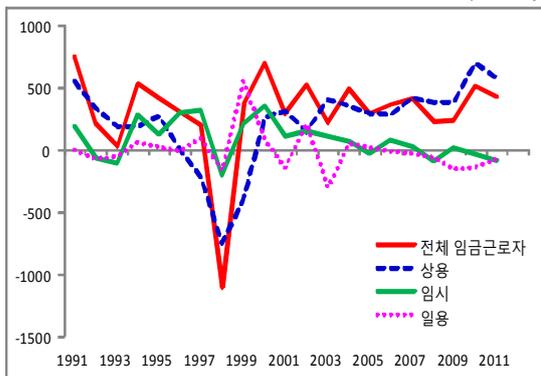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가 지속
 - 상용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및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승
 -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2011년 61.3%까지 상승

-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일자리는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 하락
 -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1999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임시근로자는 2010년부터, 일용근로자는 200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 이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근로자 비중은 2003년 34.7%에서 2011년에는 28.7%까지 하락하였으며, 일용근로자 비중도 1999년 18.0%에서 2011년 10.0%로 하락

< 임금근로자 일자리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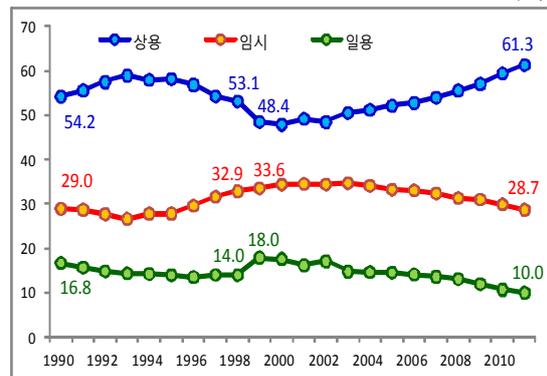
(천 명)



자료 : 통계청.

<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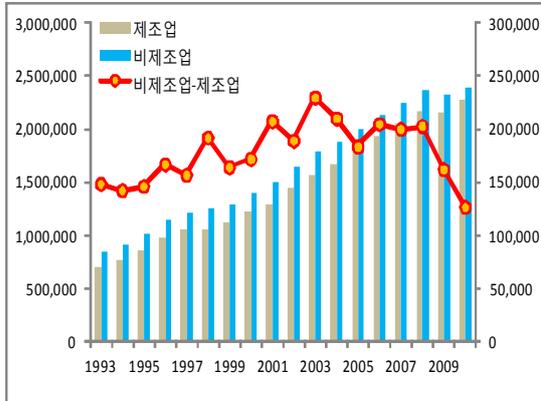


④ 임금

-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상승세가 지속되다 2011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임금 격차도 하락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04년 61.9만 원에서 2010년에 103.6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11년에는 102.6만 원으로 소폭 감소
 -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도 2003년 22.9만 원에서 2011년 12.6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과 임업 및 광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평균 임금이 제조업 평균임금을 지속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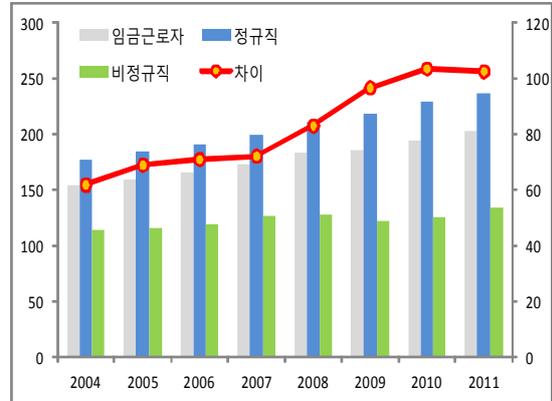
< 제조업 · 비제조업 임금 추이 >

(원)



<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 추이 >

(만 원)



자료 : 통계청.

주 : 비제조업은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을 제외한 산업 평균 임금임.

⑤ 기업 성장 및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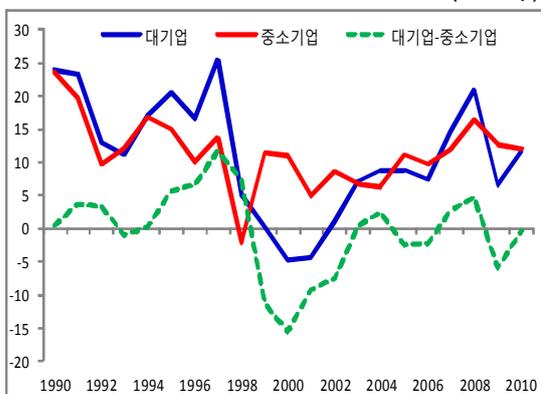
○ 총자산과 매출과 같은 외형적인 성장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간 수출·내수 기업 간 차이는 최근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소기업 간 총자산 및 매출 증감률 차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전환

- 대·중소기업 간 총자산 증감률 차이는 1990년대 평균 2.6%p에서 2000년대 이후 -3.0%로, 중소기업 총자산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
-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 간 매출 증감률 차이도 3.1%p에서 1.1%p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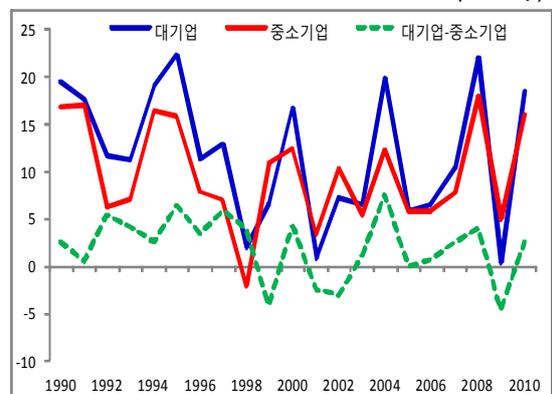
< 대 · 중소기업 총자산 증감률 >

(%, %p)



< 대 · 중소기업 매출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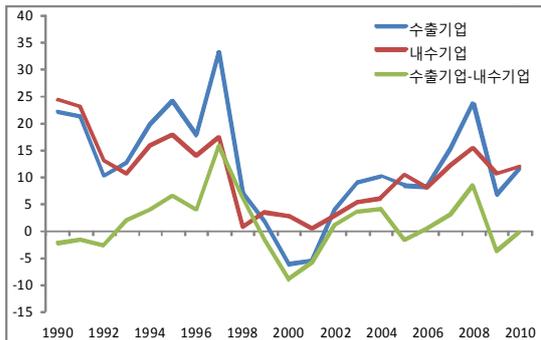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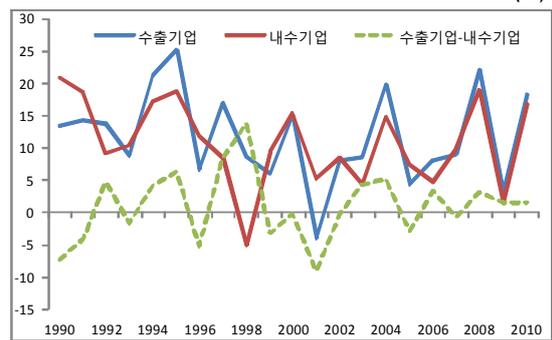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차이도 최근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총자산 증감률 차이는 1990년대 평균 3.0%p에서 2000년 이후 0.0%p로 축소. 최근 내수기업 총자산 증가율이 수출기업 상회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매출액 증감률 차이도 1990년대 평균 1.5%p에서 2000년 이후 0.5%p로 축소되었으며, 최근 1%대 유지

< 수출·내수기업 총자산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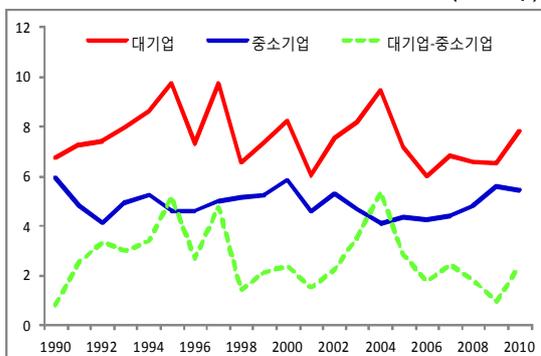
< 수출·내수기업 매출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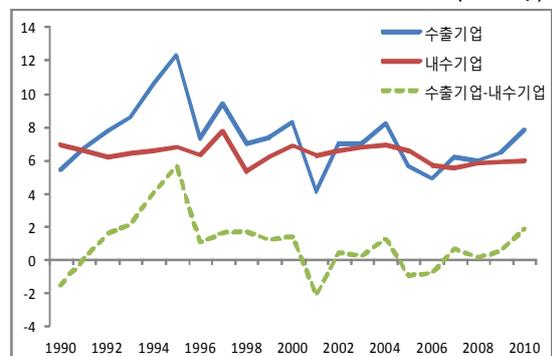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수익성 측면에서도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 간 차이는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나,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축소됨
 - 제조 대·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차이를 보면 1990년대 평균 2.9%p에서 2000년 이후 2.5%p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09년까지 축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다소 상승함
 - 수출·내수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다라도 차이는 1990년대 1.8%p에서 2000년 이후 0.3%p로 축소

< 제조 대·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 (% , %p)



< 수출·내수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 (% , %p)



자료 : 한국은행.

3. 시사점

- **국내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다 최근에는 완화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국내 양극화 현상은 부문별, 시기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가계 소득과 소비 구조, 일자리,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완화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도 부문 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

- **우선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동시에 ‘일=직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하는 복지’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주거, 보육 등과 같은 취업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함

- **산업양극화 문제도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부문의 혁신 가속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의 유지 및 지속 추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나, 이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
 -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소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의 자원이전에 의한 제로섬 분배가 아닌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이부형 연구위원(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원(2072-6220, chungm@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8일	6월 14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64	1.64	0.00%p
	엔/달러	81.19	80.66	77.66	79.66	79.44	-0.22¥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570	1.2564	-0.0006\$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554	12,652	98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459	8,569	11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25	3.29	0.04%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75.4	1,166.3	-9.1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35.6	1,871.5	35.9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8일	6월 14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4.28	84.11	-0.17\$
	Dubai	88.80	106.75	104.89	96.51	95.59	-0.92\$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72.88	272.05	-0.8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4.2	3.5	3.6	3.3	3.6	4.0	
	민간소비 (%)	0.0	4.4	2.9	3.0	2.1	1.1	2.3	2.5	
	건설투자 (%)	3.4	-3.7	-11.0	-4.2	-4.0	-2.1	-5.0	2.3	
	설비투자 (%)	-9.8	25.7	10.3	7.7	1.2	-3.3	3.7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